

오피니언

월/요/광/장

장택규



10여년 전 일본 연수 기간 중 짬을 내어 장거리 버스를 타고 큐슈섬을 횡단하던 때의 일이다. 서쪽 끝 벳부시에서 출발한 시외버스가 아소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동쪽 끝 나가사키시로 가다가 어느 휴게소에 멈추어 섰다. 버스가 멈추자 승객들이 일제히 기념품 가게에 들러 무언가 대량으로 사고 있었다. 무엇을 사는지 물어보니 나가사키 특산품이었는데, 아릴 때 부모님이 예약장에 다녀오시면 맛볼 수 있었던 그 카스테라였다.

오페라 나비부인의 무대에도 유명한 나가사키의 막부시대의 쇄국 시기에 외국인에 개방되어 항구를 통해 포르투갈, 네덜란드, 중국, 조선 등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이 많이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카스테라, 딸기케익, 썬빵 등의 음식물을 발전시켰고 이를 제품이 아직도 나가사키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도 객지에 여행을 가면 그 지방 특산품을 사가지고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속이 남아 있다. 옛날에는 본인이 직접 들고 다녀야 했으나 요즘은 택배제도가 잘 발달해 있어서 기념품 가게에 대량을 주문하면서 집으로 배달을 부탁한다고 한다.

지역 특산품과 경제 활성화

그러다 보니 특산품의 부피가 조금 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년 광주로 발령이 난 이후 서울에 갈 일이 있거나, 외지 손님이 오실 때 간단한 선물로 무엇이 적합할까 많이 찾아보았다. 지역 내 관광지를 들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고 보았다. 녹차, 꿀비 등과 같이 일부 시군에서 대표 특산품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그나마 생산지까지 가지 않으면 직접 구입하기 어렵다.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의 휴게소는 물론이고, 광주·전남지역의 관공적인 광주공

향, 광주 고속터미널, 광주역, 광주 송정역 등을 살펴보면 지역 특산품을 발견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협조하여 광주 시내 주요 교통 편의시설에서도 전남의 주요 특산품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현재 광주시나 전라남도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 소득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지자체의 세금 수입도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시에 노력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지역 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정부 인구를 늘리기 어렵다면 관광이나 문화 활동을 추구하는 유동인구의 우리지역 방문을 더욱 늘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늘더라도 이 지역 방문객

이 이곳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광주·전남을 방문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방문객이 이곳에 와서 장기간 머물게 하고 특산품 등을 많이 사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주민이 공동 특산품을 개발하고 특산품의 생산 또는 제조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도 12월 초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수유마을과 매화마을만 범비지 않고, 섬진강변의 모든 마을에 외지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화창한 봄날이 빠른 시일 내에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체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지역 특산품도 많이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짝 피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특산품과 경제 활성화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윤상도

바야흐로 '분노 권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크고 작은 언론, 포털(portal), 기타 인터넷 매체에는 오늘날 분노를 유발하는 소식들이 넘쳐난다. 독자들 또한 경쟁하듯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분노 권유'의 수준 또한 강도를 더해간다.

'분노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한 매튜 맥케이(Matthew McKay) 박사에 의하면 분노 또한 때로는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분노는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차단하거나 해소하도록 도와주며, 불안이나 상처, 죄책감, 걱정 또는 상실의 감정

분노의 조절과 민사재판을 이기는 법

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쉽게 표출된 분노는 그 자체로 중독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중독성의 분노는 당사자를 점점 더 적절한 행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성향이 있다. 지속적인 분노는 무력감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유발하며, 심리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매튜 맥케이는 분노의 대가를 적시하고 대안적인 스트레스 감소 전략을 강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필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 법정에서 나타나는 '분노의 표출'이 해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해짐을 느낀다. 물론 필자가 초임 판사였던 시절에도 흥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 높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당사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재판장이 개입할 경우 외형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재판장의 제지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없이 분노를 쏟아내는 당사자가 적지 않다.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므로 법정에서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전제 아래, 상대방이 발언할 때마다 수시로 끼어들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도 시비를 걸고, 물론 평범한 시민의 경우 법정에서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한편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저릴까'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당사자가 좋은 인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법정에서 분노를 표출한 당사자는 그 순간에는 속이 후련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분노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민사재판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리거나 조리 있게 전달하고 증거 자료를 어느 정도 충실히 수집하는 데 승패가 달려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을 법정에서 적절히 증명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노

의 표출을 쏟는 에너지를 아껴 이를 자신의 주장을 가다듬거나 증거 수집에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특하면 흥분하고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당사자와 법정 밖의 물음표로써 이성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 중 어느 쪽이 재판부에 신뢰감을 줄지는 자명하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또는 상대방 증인의 증언이 모순될 경우 중간에 끼어들어 화를 내거나 말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모순된 진술을 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철학하게 그 모순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거짓 증거나 쟁점을 흐리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쪽에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상대방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마저도 어렵다면 법정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잘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판 진행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민사재판을 이기는 것은 사나운 호랑이가 아니라 꿀이 많은 여우이다. 우직한 곰도 호랑이보다 유리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고



정세화

최근 국제무역환경의 중심축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G20 국가 중 물리적 영토가 가장 작은 우리나라는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무역거래의 글로벌화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규모를 달성하였고, 올해에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5%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FTA가 미래성장을 좌우할 성장동력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올해에는

지역기업, 더욱 철저히 FTA 준비해야 한다

EU, 페루 등 7개의 FTA가 발효되어 44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수출입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중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세계 18%와 FTA를 하게 된다. 게다가 일본, 중국, 호주 등과 FTA를 준비하고 있어 FTA는 피할 수 없는 경제 환경이다.

한-EU FTA 발효 후 100일간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로 황 유럽 수출이 감소(-1.1%) 추세였으나, FTA 특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의 수출이 증가(17%)가 전체 수출 감소분을 상당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품목만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여 황 EU 무역수지가 8월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다. 광주전남지역도 9월 말 기준 한-EU 무역거래는 수출 12억 7천만불, 수입 4억 9천만불을 기록해 7억 8천만불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무역 1조달러에 대비해 광주지역 수출입업

체들은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FTA는 원산지 확인이 비교적 철저하지 않은 국가와 발효되어 왔다. 그러나 EU,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기업은 오래전부터 FTA를 시행하여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통한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 기업이 원산지 관리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FTA가 오히려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6천유로 초과 물품을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관세해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관리를 하여야만 한다. 우리 세관에서도 2010년 7월부터 한-EU FTA 발효 전까지 총력을 다해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지정해 왔고, 발효 후엔 지역기업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세관을 방문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FTA 전문직원들에 의한 기업컨설팅, 산단 품목별 설명회 및 각종 교육 지원 등 지역 수출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출기업은 FTA를 통한 세테크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실제로 EU 및 미국에서는 중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EU는 매년 전체 수입 건의 0.5% 정도에 대해 세부조사를 하는데 우리 기업도 연간 3천건 정도가 세부조사(검증)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위반으로 세부조사가 적발되면 기업은 기준에 면제받은 관세는 물론 막대한 '벌금폭탄'에 휘말리게 된다. 한-EU FTA의 경우 관세철폐 혜택이 큰 섬유·의류 등의 경우 원산지준수를 두고 있어 실을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역에 있어 제품을 만들어야 한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FTA 체제에서 지역기업 CEO는 FTA에 대한 관심을 제기하여 FTA대책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아직도 인증받지 않았다면 세관을 통해 조속히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관리시스템 없으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 양성이 필요하다. 〈광주본부세관장〉

병원 입원실에도 인터넷 통신망 설치했으면

요즘은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기 때문에 웬만한 건물에는 전부 다 광통신이 깔려있다. 하물며 수십 수백 명 이상 입원해 있는 병원이야 당연한 설비이다.

얼마 전 조카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병문안을 갔더니 심심하다며 PC방에 같이 가자고 졸랐다. 어린 초등학생이 병실에 하루종일 있거나 지루해 하는 건 당연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삼촌이 노트북 갖다 줄까?" 했더니 그런 무용지물이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것은 정부가 병원신축 허가 조건으로 반드시 의무화 규정으로 만들어 병원 건물

을 지을 때 필수로 설비토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기존에 이미 지어진 병원들도 인터넷 통신망 설비를 추진해야 한다. 다른 곳도 아닌 병원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입원실에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료하고 답답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TV만 시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특히 비즈니스맨들은 병원에서라도 쉴 수 있어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일부 큰 병원들은 아예 노트북 대역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보통신 강국이라면 병원 입원실에 랜 통신망을 설치해 놓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김선강·광주시 북구 용봉동

을 지을 때 필수로 설비토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광양컨부두 위기, 정부는 뒷집만 질텐가

광양 컨테이너항이 흔들리고 있다. 광양항은 지난 1998년 동북아 10대 국제물류항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부산항과 함께 정부의 '두포트(Two-Port)' 핵심 항만으로 건설됐다. 하지만 물동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내 제2의 항만이라는 위치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광양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06년 하역능력(388만TEU)의 45.3% 수준에 머무르다 2007년 31.4%, 2008년 33%, 2009년 33%, 2010년 38.1% 등 하향 추세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물동량은 16만300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4000TEU)보다 9.4% 감소했다. 그나마 최근 3개월(7~9월) 동안 물동량이 47만 8000TEU에 그치면서 인천항의 49만 2000TEU에 밀려 국내 2위 항만의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광양항의 위기는 무엇보다 정부가 두포트 정책을 유명무실화한 데 있다. 물

류비 절감을 명분으로 인천과 포항, 울산, 평택 등지에 컨부두 건설과 확장을 용인하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광양항이 물동량 부족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

광양항 개발은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돼 온 국가 정책이다. 광양항의 경쟁력이 부산 신항보다 앞서는 게 이미 정부 연구기관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정부는 광양항과 연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물론 물류시스템 개선 등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 전제는 두 포트 정책의 복원과 내실있는 추진에 있다.

지역사회와 항만공사 측의 공동대응 또한 절실하다. 수도권 화물 유치와 중국 등 해외 포트 세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수적이다. 멀티포트(Multi-Port)의 무한 경쟁 속에 자생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바꾼 채 왜 꼼수 쓰나

역사 왜곡에 대한 학계·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져 국사편찬위원회가 내년 1월을 시행하기로 했던 중학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을 최근 서둘러 발표했다. 집필기준에서 빠졌던 4·19혁명, 5·16 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중학 교과서에서 국사편찬위가 수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진일환이 같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거나 불과 같다.

역사를 농단하려던 국민적인 반대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분책으로 내놓은 검정기준이란 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검정기준은 100점 만점에 25점이 '교육과정 준수' 항목에 배정됐지만 이 항목이 중 사건에 대한 기술이 4가지 사유소 중 하나여서 사실상 6점이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지만 배점만 놓고 보면 유명무실할 정도다. 또 사건 명칭만 거론하더라도 배점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

게다가 상위 규범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친일이나 독재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하위 요인 검정기준으로 상위, 차상위(집필기준) 규범을 뒤집을 수는 없다.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5·18 등 주요 사건들이 검정기준에 포함되고 집필기준에서 빠진 것은 안이도안이다'며 "반드시 집필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18은 18년 독재정권과 군부 쿠데타의 상징인 5공, 6공을 무너뜨리는 기록이 됐고,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은 민주화의 뿌리다.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인정할 것도 이런 숭고한 역사성과 그 가치에 있다.

왜곡된 집필기준은 그대로 둔 채 검정기준만 손질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정부는 '5·18' 등 민주화와 친일청산 과정을 집필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역사 왜곡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뿐이다.

無等鼓

임동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광주 금남로 은행나무 잎은 절반이 초록이다. 남녘의 동백은 때 이른 꽃봉오리를 열고 과수원에는 사과꽃이 피었다.

중부지역에선 개나리와 제비꽃이 성급하게 꽃잎을 내밀고, 봄까지꽃과 진달래도 '철없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봄꽃이 만발하자 월동준비를 해야 할 벌과 나비도 꿀을 모으느라 분주해졌다.

꽃감을 만들기 위해 싸리꼬챙이에 꿰어 매달아놓은 갈뎨엔 거뭇 거뭇 곰팡이가 슬었다. 건조는커녕 물러 터져서 과피도 퍽퍽 흘러내린다. 포도도 복숭아가 가을까지 인기를 끄는 가 하면, 어휘량이 줄어들면서 '가을 전어'는 옛말이 됐다.

겨우내 먹을 김장도 입동 전후가 적었는데 연말까지 기다리는 집들이 많아졌다. 모기 등 해충들은 늦가을까지 활동을 연장한 지가 오래다.

겨울의 문턱에서 이상 고온과 흐린 날씨가 반복되면서 빗이든 현상들이다. 이달 초 광주의 낮 기온은 역대 최고인 27.1도까지 치솟으면서 '11월 더위'가

이어졌다. 꽃과 나무, 곤충들이 계절을 착각할 만도 하다.

그런가 하면 옛그제는 장마철이나 있을 법한 폭우가 쏟아졌다. 18일 전남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남에는 120mm 가가운 비가 쏟아졌다.

반세기 만의 홍수로 국토 전역이 4개월째 침수 위기에 놓인 태국의 예에서 보듯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이상 고온은 범지구적 현상이 됐고, 해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60년 뒤에는 남한 전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례군 토지면의 숲에서는 온대수종인 소나무의 밀도는 감소하고, 난대수종인 비목나무와 떡갈나무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환경과괴와 온실가스 증가에 인습해온 지구의 바이탈 사인(vital sign)이자 경고다. 그 미래는 주변인 인간의 대비 여부에 달려 있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이상기후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